

도민 의견 추경예산안에 담는다

전북도 주민참여예산위 열려... 편성·재정운영 방향·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등 논의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14일 도청에서 열렸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예산(안)에 담기 위해 열린 회의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주민, 재정전문가 등 30여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다.

내용은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도 재정운영 방향, 주민참여예산제 후반기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세수전망은 불확실한 반면,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 부응 및 당면 현안에 따른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농생명 및 관광, 탄소산업 등 도정 핵심사업 마무리 및 일자리, 민생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되 전북 대도약을 위한 건전재정운영에 힘쓰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17년 하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 시기가 늦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이 예산(안)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개최시기를 한 달 가량 앞당겨 효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



“일제고사 즉각 폐지하라” 14일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와 고 김인봉 선생 추모사업회는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주장했다.

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주민공모사업에 대하여 실국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검토,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

이다. 한편, 지난 9일에는 도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광복기 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실국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특수학생들도 평등한 교육 받아야”

최영규 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규(익산4) 의원은 14일 “특수학생 개인의 장애상태와 발달단계, 특성 등에 따라 일반학교 교육과정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 의원은 도내 특수학생을 위해 수차례 걸쳐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행정사

무감사 등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세우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일례로, 익산 공립유치원인 송리유치원은 일반놀이터로 공사가 진행돼 왔지만 특수학생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무장애놀이터)로 수정·제안해,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고 설계도 변경과 예산반영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교육위, 특성화고 방문 운영실태 점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도내 특성화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 의원들은 14일 전주농생명과학고와 원주 고산고, 한국전문대학교 등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3곳을 방문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진로교육 사례 등을 파악해 교육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현지의정화 등을 펼쳤다.

전주농생명과학고에서 최영규(익산4) 의원은 특성화고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실습학생의 전공과의 일치 여부를 질의했다.

특히, 그는 “비전공 관련 현장실습

생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관련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도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에게 청소년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전문대학교등학교에서 양용모(전주8) 의원은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과 성과위주의 정책문제도 인해 지난 1월에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된 것”이라며 “실적위주의 취업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히, 중간에 부적응으로 돌아오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행자위, 두여정보화마을 방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익산 두여정보화마을을 방문해 정보화마을 운영상황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익산 두여정보화마을은 2005년 11월 정보화마을로 조성, 파프리카, 멜론, 딸기 등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와 함께 육개떡 만들기, 감자 캐기, 매실 따기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김진성 기자

도,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전북도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35만4,000두(1만1,000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구입하여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개업 수의사등을 동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김진성 기자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임시특례법 시행

내년 6월 2일까지... 작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전·답·과수원 이용 산지 대상

전북도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특례법을 적용키로 했다.

현실적으로는 산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 지목변경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임시 특례 조치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전북도 산림복지과에 따르면 산지를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이용확인서(5년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서), 토지이용신청서,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산지이용확인서(5년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서), 토지이용신청서,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갖추어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금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은 산지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

르 조차로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임시사용제한지역 등 다른 법률에 지목변경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또한 불법행위의 기간이 7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산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지목변경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밭, 대추, 조경수, 도라지, 취나물, 두릅, 오미자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산지는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임시특례로 인해 그동안 기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이 없이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직불제 및 농업손실보상 등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분할 또는 등록전환축량성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산지이용확인서(5년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서), 토지이용신청서,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갖추어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금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은 산지관리법의 일부개정

도의회 환복위, 위탁시설 운영실태 점검

자연환경연수원, 무주·진안권 광역폐기물 전처리시설 방문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는 14일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자연환경연수원 및 무주,진안권 광역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전북도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연수원과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 운영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위원들은 먼저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연수동과 숙박동, 인공습지, 자연체험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반딧불이·형설지공 프로젝트,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교실 등 연수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청취했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해 2015년 9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C’ 등급을 받은 연수시설과 숙박시설 2동에 대한 보수공사 추진상황을 살펴봤다. 이어 무주와 진안지역에서 발생하

는 생활폐기물의 고형연료(SRF)를 생산하는 시설을 방문, 전체 처리과정을 둘러보고 쓰레기 매립 감소와 재활용 확대방안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훈열 위원장은 “의회와 내용 모두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이 환경교육에서 전국 최고가 되어 달라”며 “연수원 보수공사가 차질없이 완료되어 도민이 안전하게 숙박하면서 연수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자연환경연수원은 1986년에 개원하여 현재 (사)자연생태환경연구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환경부 인증제 청소년 환경교육기관으로서 자연생태 체험, 전문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주,진안권광역폐기물 전처리시설은 2014년 3월부터 (주)효성에바라 엔지니어링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